

BM특허 분쟁 지난해 50~60건

한솔CSN의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계기로 BM특허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솔이 취득한 특허는 특정 기술이나 상표를 통한 자산 개념의 특허가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 통용되는 마케팅 방식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넓은' 아이디어를 마치 새로운 기술인양 특허를 내줬다는 게 LG이숍 옥션 NHN등 인터넷쇼핑몰과 포털업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특허청 관계자는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 업계에 보편화될 정도의 BM이라면 원천특허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런 만큼 특허권은 더욱 인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쇼테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하고 다단계판매업체 암웨이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BM특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때도 논란의 초점은 이미 일반화된 마케팅 수단을 특허로 인정해줬다는 것이었다.

최근 정보기술(IT) 경기침체로 BM특허출원건수는 감소세를 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BM관련 분쟁건수는 99년 6건에서 2000년에는 12건으로 늘어났고 2001년에는 3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0~60건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웹서비스 표준, 저작권 문제로 좌초 위기

새로운 웹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표준기구인 W3C는 웹서비스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단을 결성했다. 이 규정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거나 연결하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웹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상호연동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W3C는 웹서비스에 필요한 표준언어를 제정함으로써 비즈니스에 필요한 웹서비스를 서로 연계시키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좀더 단순하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표준언어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웹서비스 분야는 결국 분열하고 말 것이라고 W3C는 경고한 바 있다.

아이오나 테크놀러지의 CTO겸 W3C 웹서비스 아키텍처 위원회 회원인 에릭 뉴커머는 "웹서비스 개발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간의 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웹서비스 구성의 핵심은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여러 웹서비스를 통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전문가들은 MS와 IBM, BEA 등과 같은 W3C 핵심 멤버

들이 탈퇴함으로써 웹서비스 표준 제정이 무산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W3C의 회원사 중 MS와 같은 일부 업체는 지적 재산 사용을 위해 로열티 지불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뉴커머는 "W3C는 로열티와 특허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MS는 로열티 방식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며, "MS와 W3C는 특허 및 로열티 문제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상태"라고 지적했다.

새롭게 창설된 웹서비스구성실무단(WSCG Web Services Choreography Working Group)은 이런 일을 전담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이제까지 W3C와 OASIS 등 표준기구들은 웹서비스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표준화했지만 절차 통합과 명령 방식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WSCG는 선언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 독립적인 공정한 포럼을 통한 세부규정 조치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웹서비스가 분열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여론과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세부규정을 통해 종합적인 웹서비스를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표준제정에서도 업체 독립적이라는 말도 실천이 더 어려운 법이다.

W3C는 수많은 웹서비스 관련 기술 중 HP가 제안한 WSCL(코드명 휘슬)과 BEA, 인탈리오,

SAP와 썬 등 제안한 웹서비스 구성 인터페이스(코드명 위스키)만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BPML과 ebXML의 BPSS, IBM의 WSFL과 MS의 XLANG 등이 W3C의 승인을 받아 경합을 벌이고 있다.

웹서비스 표준을 둘러싼 엇갈린 이해관계 IBM과 MS, BEA는 BPEL4WS(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s)와 그와 유사한 구조의 웹서비스 WS-코디네이션 및 웹서비스 WS-트랜잭션 등을 공동 개발했다.

W3C 실무단은 선언문을 통해 관련 업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상호간의 언어를 호환하는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는 '업계의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된 것을 의미한다고 서술했다.

현재 각 기업들이 앞다투어 표준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웹서비스 통합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최종 결정된 표준언어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게 될 업체 입장에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화를 통해 자사의 기술이 일회성으로 전락하고, 특정 기술을 소유한 업체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ZDNet

애완견 사진도 저작권 인정

애완견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조용준 판사는 애완견 사육·분양업을 하는 원모씨가 "애완견 사진을 무단 도용해 피해를 봤다"며 애완견 관련 인터넷 사

이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 57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문사진사가 애완견 사

진을 촬영하면서 애완견의 생김새, 색깔 등에 따라 배경색과 소품을 결정하는 등 나름대로 개성을 반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사진사는 저작권 일체를 의뢰인인 원고에게 넘기기로 한 만큼 이들 사진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유명 애완견 분양업체를 경영하는 원씨는 1998

년부터 3년동안 사진사에게 의뢰, 자신이 키우던 애견의 사진을 찍어 달력 등의 제작에 이용해 왔으나, 김씨가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국민일보

금융상품도 BM특허시대

외환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금융상품 비즈니스모델(BM)로 특허를 취득, 연간 100억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중도해지 예금신탁 인터넷 매입' 비즈니스 모델. 즉 다른 은행의 거치성 예금 및 신탁을 고객이 중도 해지할 경우, 이를 인터넷을 이용해 넘겨받고 중도해지 금리와 만기금리의 차익을 수익으로 챙기는 방식이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난 2000년 4월 특허 출원한 것으로, 향후 20년 간 독점적인 권리 보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타 사업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국내은행 총 수신고는 511조이고, 이 중 정기예금

수신고는 205조원이다.

외환은행의 정기예금 중도해지율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2억원 이상 가입자가 해지한 금액은 대략 43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입 후 1개월 미만과 10개월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금액은 30% 정도로, 총 13조 2000억원이 이 모델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가운데 외환은행이 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면 6600억원이 되고, 최소 2% 정도의 마진율만 적용해도 연간 132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외환은행은 이번에 특허를 받은 비즈니스모델 외에도 사이버 환전거래, 환전클럽 등 10개 모델에 대한 특허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디지털타임즈

국내기업 브랜드 관리 상표제작 치중 '헛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월드컵 이후 높아진 국 브랜드에 비해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적 마인드, 경영방법론 및 조직체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국내 511개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영실태"를 조

사한 결과 브랜드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8.4%인 145개사에 불과했으며 전담조직의 인원도 1~3명이 49.7%, 4~6명이 2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3.8%)이 중소기업(22.2%)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전략 차원에서의 브랜드 관리 중요성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의 79.8%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톱매니저의 브랜드 관심도는 평균 69.5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브랜드 전략 실행에 있어서는 브랜드 전략 수립이나 브랜드 자산평가관리 등 상위적 브랜드 관리 개념보다 로고·홍보책자 발간 등 하위적 개념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조사대상 기업 중 107개사(21%)만이 자사 브랜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브랜드 가치평가의 애로사항으로는 적절한 평가모델 부재(40.2%)와 평가항목에 대한 정보 부족(34.6%) 등을 꼽았다.

산자부는 “기업 인수합병시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등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은 품질 등 제품경쟁력에 비해 브랜드력이 약해 해외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국내기업도 세계 일류기업처럼 CEO를 중심으로 전사적 차원의 브랜드 경영전략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네트워크 보안 특허 쏟아진다

최근 인터넷대란으로 보안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특허출원된 보안기술 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분야는 네트워크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서 특허출원된 정보통신 보안기술 344건 중 네트워크 분야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네트워크에 이어 컴퓨터시스템 보안기술이 86건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보안기술 70건, 안티바이러스 및 진단 보안기술 38건, 방화벽 또는 해킹 관련 보안기술 33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98년 18건, 99년 29건, 2000년 122건, 2001년 155건, 2002년 119건으로 나타나 2000년을 기점으로 출원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

다가 200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이유는 벤처기업의 창업붐과 정부의 정보화 기반기술확산 노력,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BM 특허출원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수요급증이 출원증가로 나타났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보안기술은 지식정보사회의 수문장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내 바이러스 백신업체들의 국내 특허출원은 극히 미미해 보안관련 특허기술의 확보에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INEWS24

반도체 설계,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이 주도

최근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이 반도체 설계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설계분야의 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의 경우, 지난해 국내외 대기업이 전체의 26%(33건)에 머무른 반면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이 74%(93건)를 차지하였다.

반도체배치설계권은 반도체배치설계에 대해 특허권과 같이 독점 권리(10년간)가 부여되는 신지식재산권. 여기서 반도체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에 필요한 각종 회로소자 및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를 말한다. 93년 이후 현재까지 1,419건이 등록되어 있다.

더구나 최근 반도체배치설계권을 등록한 대기업도 외국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등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의 경우 국내의 대기업의 3배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이 최근 반도체 설계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반도체 설계는 비교적 적은 자본의 투입으로도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여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소·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런 약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설계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 한 일이다.

사실 반도체설계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으나, 반도체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설계 기술은 선진국수준의 5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도체 제조 및 생산 분야는 대기업이 전담하고, 기술집약적인 반도체 설계는 우수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이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의 양축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품의 고성능화, 소형화, 라이프사이클의 단축 및 시장 적기진입이 중시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과 전문인력으로 무장한 이들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 하다.

특허성

최근 4년간 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 현황

(단위: 건)

| 년도 | 국내 非대기업 | | | | 대기업 | | | 합 계 |
|------|---------|----|-----|---------|-----|----|----------|-----|
| | 중소기업 | 대학 | 연구소 | 소계 | 국내 | 국외 | 소계 | |
| 1999 | 1 | 1 | 8 | 10(8%) | 23 | 97 | 120(92%) | 130 |
| 2000 | 1 | 14 | 6 | 21(20%) | 5 | 80 | 85(80%) | 106 |
| 2001 | 18 | 22 | 22 | 62(38%) | 26 | 77 | 103(62%) | 165 |
| 2002 | 10 | 16 | 67 | 93(74%) | 2 | 31 | 33(26%) | 126 |

주요 국가의 반도체 기술수준

| | | 설계기술 | 제조기술 | 조립기술 |
|-----|------|------|------|------|
| 한 국 | 메모리 | 100 | 100 | 100 |
| | 비메모리 | 50 | 85 | 75 |
| 미 국 | 메모리 | 95 | 60 | 50 |
| | 비메모리 | 100 | 90 | 60 |
| 일 본 | 메모리 | 95 | 95 | 95 |
| | 비메모리 | 70 | 100 | 100 |

* 자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새로 태어나는 대학 특허

정부는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2001. 12. 31)을 개정하여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을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 이전하여 특허권 등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충남대학교가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재)충남대학교산학연교육연구재단(법인명)이라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립하여 그 동안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국유특허 22건을 오는 1월 28일 이전한다.

(재)충남대산학연교육연구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교수의 직무발명은 법인에 승계되며, 실시보상금 지급은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의 50%를 발명자에게, 10%는 발명자의 소속부서, 40%는 법인에 배분되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 권리는 계속 유지되며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재)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2003. 1. 9)

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대학교의 국유특허 19건을 조만간에 이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국유특허가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이전됨에 따라, 특허기술이전으로 인한 로얄티 등 수익이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대학의 연구비 재창출로 이어져 대학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기술혁신 순환구조(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재투자)가 구축될 수 있기 위해서, 국유특허를 포함한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전시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시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이전에 대한 용자금(13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